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기도 중단하라

경보!

문재인 정부,
근로기준법 개악
연내 처리 추진

3면

민주노총 임원선거
결선투표,
이호동 후보조를
지지하라

2, 3면

성별 임금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4~5면

성소수자 아들을 둔
노동자가 말하는
성소수자 운동의
방향

4~5면

박유하의
언론 자유?
좌파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

6면

정의당

지도부의
낙태죄 폐지 추진 옳다
조승수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논평

5면

비트코인 열풍
대안적 화폐가
될까?

7면

민주노총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

이호동 후보조, 결선에 진출하다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조직노동자운동팀장

민주노총 9기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득표율 46.5퍼센트)와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조(득표율 17.6퍼센트)가 결선에 올랐다. 두 후보조 사이의 표 차이는 컸다. 하지만 이호동 후보조가 결선에 오른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는 산별연맹들에 기반이 있는 국민파 성향 지도자들로 구성되고 전국회의가 지지한 팀이다. 조직력이 강해, '바람'이 불지 않는 투표 상황에서 더 유리할 수 있는 후보조다.



좌파 후보조의 결선 진출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상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보여 준다

‘바람’이 불지 않은 1차 투표

이번 선거는 3년 전의 직선 1기 선거보다 훨씬 조용하게 치러졌다. 3년 전 민주노총 임원 선거 1차 투표 투표율이 62.7퍼센트였던 데 비해, 이번 선거 투표율은 54퍼센트를 넘지 못했다.

3년 전에는 박근혜 정권의 남은 임기 동안 민주노총이 수행해야 할 주요 과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박근혜에 맞서 “투쟁하는 민주노총”이 되겠다는 한상균 선본의 공약은 77일간 쌍용차 공장 점거 투쟁 지도자인 한상균 위원장후보의 이미지와 부합하면서 기층 조합원 대중의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이와 달리, 이번 선거는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이 모두 ‘바람’을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었다.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가 우세를 보인 주된 비결은 그 팀의 강점인 조직 기반이 표로 연결되기 쉬운 이 같은 상황 덕분이었다.

김명환 후보조의 우세를 “노사정 대화” 강조가 호응을 얻은 결과로 보는 것은 일면적일 것이다. 그것은 나머지 두 후보조(조상수 후보조와 윤해모 후보조)와의 공통점인데, 오히려 김명환 후보조는 ‘대화’ 쪽으로 기운 듯했던 자신의 선거운동 기초를 선거 중반 이후 ‘투쟁’ 쪽으로 미세 이동시켰다.

선거 운동 초기에 민주노총이 고립돼 있고 불신받는다면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 중반 이후에는 투쟁 공

약들을 보충해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꿈수 방안 비판,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실현, 노동법 전면개정 투쟁본부 설립 등이 그것이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에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정규직 전환과 격차 해소 모두),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제조업의 인력 감축 구조조정을 나 몰라라 한다는 것(한국 GM에서 보듯이), 집권 여당이 나서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을 시도한 것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이런 일들의 영향을 받았을 투표 지

지 기반을 지키기 위해 김명환 후보조는 기층 조합원 대중의 반응을 반영했을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이에서 일면적인 대화 강조가 별로 먹히지 않는다는 것은 기호 3번 윤해모 후보조가 10퍼센트 남짓의 지지율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는 것에서도 잘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이라는 환상, 노사정위 복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서 민주당 지지도 열어 뒀야 한다는 주장 등은 거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정부를 크게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전국노동자대회의 분위기에서도 드러났었다.

협소하지 않은 노동조합 좌파의 기반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는 이번 선거에 나온 네 팀 가운데 중도에 자리잡은 후보조였다. 그들은 투쟁과 대화의 병행을 강조했다. 3년 전 선거에서는 정치적 양극화를 배경으로 노동조합 좌파가 지지를 넓혔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과 (그 어부지리를 얻은)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중도의 기반이 넓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조가 결선에 오른 것은 노동조합 좌파의

지지 기반이 결코 협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조합원들의 자신감이 그다지 낮지 않다는 것도 보여 준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고, 지금 비교적 크다 해도 빠르게 깨지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이호동 후보조의 투쟁 강조가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는’ 주장이 결코 아님을 뒷받침한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정부와의 ‘대

화와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는 온건파들의 주장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했다.

가령 국회 환경노동위의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는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가 사회적 대화에 국회 대표를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것(8자대화)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심지어 위험한지를 보여 준다. 김명환 후보는 “국회의 본질을 믿는다”고 했는데, 참으로 순진한 발상임이 드러난 셈이다.

또,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집권

여당이 주도했다는 것은 기호 4번 조상수 후보조의 사안별 노사정 대화 제의가 허를 찔리기 십상일 것이라는 점도 보여 준다. 조 후보조는 필요한 사안별 대화의 사례로 노동시간 문제를 꼽았는데, 집권 여당 의원들은 대화논커녕 기습 개악 시도로 뒤틀음을 친 셈이다.

다행히도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조의 결선 진출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적잖은 조합원들이 투쟁적 지도부를 원하고 있음을 뜻한다.

공공부문 조합원들의 정서

기호 4번 조상수 후보조는 위원장 후보가 현직 산별연맹 위원장이라는 이점을 쥐고도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득표율 16.6퍼센트). 조상수 후보조가 공공운수노조의 큰 지지에 힘입어 결선에 진출하지 않았느냐는 관측이 많았지만 이런 전망은 빗나갔다.

조상수 후보는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시절의 성과를 부각하며 그 경험을 민주노총으로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등을 끌어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조상수 후보조의 이 같은 정책 방향은 그것을 먼저 경험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상수 후보가 끌어냈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이 점점 분명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이 정책

에 대한 환상을 조장한 면이 있다.

게다가 공공운수노조 지도부가 제시해 온 양극화의 대안은 공공상생연대기금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서 얼핏 드러났듯이 정규직 양보의 성격을 상당히 띠고 있다.

기존 공공운수노조 지도부의 정책 방향이 조합원들의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공공운수노조 임원 선거 결과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기존 집행부에 좌파적 도전장을 낸 기호 2번 엄길용 후보조가 무려

42퍼센트를 득표해, 기호 1번 최준식 후보조(득표율 47.1퍼센트)를 바싹 추격했다. 반면, 기존 집행부 계승을 표방한 기호 1번 최준식 후보조는 현직 공공기관 노조위원장들과 지역본부장들의 공개적 지지를 받고도 1차 투표에서 당선하지 못했다.

기호 1번 최준식 후보조는 민주노총 임원선거 기호 4번 조상수 후보조와 제휴하고 있었고, 기호 2번 엄길용 후보조는 민주노총 임원선거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조처럼 좌파 선본이었다.



기호 4번은 왜 실패했나?

기호 4번 조상수 후보조는 좌파가 ‘무능력’하다는 인상을 은근히 퍼뜨리며 자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을 정당화했다. 아마 좌파 진영의 표를 뺏어오는 한편 중간지대의 표를 흡수하려 했던 듯하다. 결과로 보면, 양면 노림수 모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투쟁과 교섭의 병행, 사회적 대화 추진을 강조하는 조상수 후보조의 정책 기조는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와 유사해 차이 컸기가 쉽지 않았다. 정치세력화 문제와 관련해 ‘정파운동이 아니라 조합원 중심(또는 민주노총 강화)’을 부각했던 것도 (정치와 정당이 모두 중요한 시기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조상수 후보는 ‘나는 특정 정파가 아니라 민주노총파다’라는 식으로 주장한 셈이었다. 그러나 이는 그다지 유리한 전술이 되지 못한다. 이런 논리의 ‘등록상표’ 또는 기득권은 기호 1번 측에 있기 때문이다.

이 논리가 설득력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조상수 선본도 정의당 노동부문(중앙파와 인천연합의 일부), 사회진보연대, 전태일을 따르는 노동운동연구소 등 특정 정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좌파 측의 투쟁 강조를 대안 부재, 전술 없는 일점돌파, 한방주의인 것처럼 은근히 폄하한 것도 별로 설득력을 얻지 못했던 듯하다.(이유는 필자가 위에서 설명했다.) 그런 투쟁성 깎아내리기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노동조합 기구들의 안착과 함께, 노동조합 상근간부층이 갈수록 대담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아짐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다시 강조하거나, 이번

선거는 노동조합 좌파의 지지 기반이 결코 협소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자신감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러므로 특정 조건들과 맞물리고 좌파 측이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 기반은 더 확대될 수 있다.

물론 혁명적 좌파는 그 속에서 자신의 전망과 지향 제시를 통해 노동자 투쟁 강화에 그 나름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연내 처리 추진! 격차해소론은 위선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려 한다. 문재인은 12월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근기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주문했다.

그에 따라 다음날 오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하성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로 마련된 개악안대로 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7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은 직접 국회를 찾아, 여야 간사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회 책임이 무거울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 11월 국회 환노위 소속의 여야 3당 간사 합의로 제시된 개악안의 주요 골자는 주 52시간 상한제의 단계적 적용, 중복할증 삭감 등으로 장시간 노동을 온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안은 정의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일단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미뤄졌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문재인이 직접 나서 연내 근기법 개악을 촉구한 것이다.

박용만

문재인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기법 개정”이라고 왜곡한다. 그는 단계적 방안을 반대하는 노동조합 운동을 향해서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건데 왜 반대하느냐고 비난할지 모른다. 이것이 10년 넘는 문재인 정부의 레퍼토리다. 노동운동이 특고 보호법(노동3권 부정)을 반대한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특별법(1.5권만 인정)을 반대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그렇게 말했었다.

그러나 단계적 적용과 중복할증 삭감은 모두 장시간 노동에 지친 수백만 노동자들의 고통을 연장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저임금 노동자들일수록 더 열악한 조건에 내몰릴 수 있다.

주 40시간 노동과 주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다.



민주당도 임금 삭감에는 기업주 편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해 왔다. 이 파렴치한 행정해석의 목적은 휴일에도 중복할증 수당을 주지 않고 노동자들을 싼 품삯으로 오랜 시간 부려 먹는 것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을 포함해 환노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개악안은 방법만 다를 뿐, 노동적폐인 행정해석과 똑같은 효과를 낸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삼모사로 온전시키려는 것이다.

게다가 주 52시간 상한제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중복할증 수당마저 주지 않으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계속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리게 된다. 집권 여당이 노동조건을 바닥을 끌어올려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는 아무 관심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파렴치

집권 여당의 진정한 관심사는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환노위 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개악안의 취지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을 주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10월에 기업인들은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을 만나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을 요구했고, 홍위원장은 “중복할증 불가” 입장을 밝히며 화답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격차 해소 운운하며 대기업 노동자들의 양보를

요구해 왔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양보인지 이번 개악안 추진으로 밝혀 드러났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악안이 노골적인 사용자 편들기라면서 이렇게 꼬집었다. “잘못된 행정해석을 한순간에 바로잡으면 기업이 지게 될 부담이 걱정된다고 한다. ... 부당한 법 적용으로 십수 년간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 온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지 않는지 묻고 싶다.”

노골적인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산별대표자회의를 통해 긴급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내팽개치고 근로기준법 개악 연내 통과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소속 산별조직들은 실질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

현재 이용득 의원 등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중복할증 폐지나 연내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가 직접 나서 연내 개악 처리 촉구를 하고 있는 지금, 인안하게 상황을 낙관하고 경계를 늦추선 안 된다.

만만찮은 대중 투쟁을 벌여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래야 연말 임시국회 처리를 막고, 중복할증에 대한 사법부 판결(내년 1월 18일 대법원 공개변론 예정)에 압력을 넣으려는 시도도 좌절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결선투표

이호동 후보조에 투표하라

민주노총 9기 임원선거 결선에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와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조가 진출했다. 두 팀은 사회적 대화, 투쟁과 교섭 관계 등 여러 쟁점에서 비교적 선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는 투쟁과 교섭의 병행을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강조점은 교섭, 대화, 참여에 있다. 김 후보조는 선거운동 중반에 ‘8자회의’를 제안했는데, 노사정위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노사정 대화 기구다. 김 후보조는 경영 참가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김명환 후보조는 대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견인”하고 사회 대개혁을 이루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자 연대> 신문이 이미 지적했듯이, 누구나 아는 자본주의적 정당과 그 정부를 견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사정 대화로는 경영 참가로든 노동자들이 타협하고 양보하라는 압박을 가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1998년 노사정위 참여, 2005~2006년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참여 경험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런 양보 압박에 김명환 후보조가 투쟁으로 맞설지는 분명하지 않다. 김 후보조는 “준비된 총파업”이라는 기치를 걸었다. 오랫동안 이 말은 온건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총파업이 필요할 때조차 그것을 반대하는 논리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시간을 질질 끈 결과는 (철저한 준비는커녕) 흔히 김빠기로 나타났다. 결국 ‘철회’ 아니면 ‘뺑파업’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자멸적 전략인 셈이다.

게다가 김명환 후보조는 사회 대개혁을 이끌 대안으로 “사회현대전략”을 내놓았다. 김 후보조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흔히 사회현대전략은 정규직 양보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은 경험이 입증하듯이 비정규직과 저임금층의 조건 개선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 해가 된다.

불문율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는 다른 후보조들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한계를 비판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공문구가 될 위험도 보여졌다. 김명환 위원장 후보는 전교조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지지 거부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전교조 집행부의 고민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이해하기보다 동료 노조 지도자들의 비겁함을 더 잘 이해해 준다면,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집행부의 비정규직 노조 내쫓기에 대한 비판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비겁하고 소심한 태도로는 여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위선(기간제 교사 등을 제외)에 맞서기 어렵

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추진하기도 어렵다.

이런 약점은 김명환 후보조가 노동조합 상층 관료기구의 안정을 중시한다는 점과 관계가 있다. 김명환 후보조는 노동계급의 단결을 산별노조 지도자들의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오해에 따라 그 팀은 정파들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고 본다.

그러나 노동조합 상층 지도자들이 한 배를 탔다는 생각으로 서로 ‘존중’하는 불문율을 (기층 노동자들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해치는 일이다.

대의원대회나 총투표를 통한 파업 결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민주적으로 파업을 중단하는 노조 지도자들을 묵인하는 관행이 대표적이다. 2013년 철도파업 정리 과정을 돌아보면 김명환 위원장 후보도 예외가 아니었다.

‘우리는 전체를 대표하고 남들은 일개 정파일 뿐’이라는 생각도 비민주적이기 이를 데 없다. 자신이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의결 사항을 일부 정파들에 의한 ‘여론’ 왜곡의 결과로 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명환 후보조는 지난 정책대의 원대회에서 ‘진보대통합’ 안이 부결된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그 안은 진보·좌파를 두루 포괄하기는커녕 오히려 배타적으로 특정 정파들의 정치적 이익을 관철시키려 했다가 대의원 다수의 민주적 결정에 따라 거부됐다.)

자신감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조는 좀 더 분명하게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조의 결선 진출은 적잖은 노동자들이 투쟁적 지도부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일부 노동자들은 지난 우파 정권들 하에서 억눌렸거나 빼앗겼던 임금과 노동조건을 되찾고자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을지병원 노동자들처럼 새로운 부문이 있는가 하면, 노동개악의 주요 대상이었던 공공부문도 있고, 너무 불충분한 비정규직 정책에 실망한 노동자들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 해선 안 된다’며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노동자들을 자제시키고 변화 염원의 내용과 속도를 늦추는 중재자 구실을 해주기를 바랄 것이다.

이런 때 대화와 협력에 강조점을 둔 지도부가 당선하는 것보다 투쟁성을 표방하는 지도부가 당선하는 것이 노동자들이 저항에 좀 더 자신을 가지는 데 유리하다.

노동계급에 이익이 되는 개혁은 노동자들 자신이 투쟁에 나설 때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이 과정에서 의식과 조직을 강화할 수 있다.

이호동 후보조가 결선투표에서 역전하기는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거니와, 그럴수록 더 많은 분노한 노동자들이 투표에 나서야 한다.



정권 교체

성별 임금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정진희

문재인은 대선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3퍼센트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OECD가 발표한 2015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7퍼센트로 1위다.

그러나 출범 일곱 달이 넘도록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성별 임금격차 해소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재인은 최초로 고용노동부 장관에 여성(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영주)을 임명했지만, 지금껏 나온 '대책'은 고작 성별 임금공시제와 여성 승진할당제 도입 얘기뿐이다.

보잘것없는 성별 임금공시제

성별 임금공시제는 기업에 남녀 임금 통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일 뿐, 고용주들의 임금 차별을 규제하는 것과 무관하다. 기업들은 일방한 성별 임금 공개조차 반발하지만, 설사 법률로 임금 공개를 의무화할들 기업이 알아서 임금 차별을 없앨 리는 없다. 이미 남녀 고용평등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이 있지만, 기업들이 이를 간단히 무시해 유명무실하다.

요즘 여성단체와 학계의 온건 개혁주의자들은 올해 독일에서 제정된 성별 임금공시제에 주목하며 이를 성별 임금격차 해소책으로 부각한다.

그러나 이 법은 200인 이상 사업장

의 노동자가 자기 임금의 기준에 관한 정보를 얻을 개인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뿐이다. 개별 노동자가 인사처에 가서 자기 임금에 관한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 5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들은 동일임금과 관련해 피고용인의 임금 체계를 정기적으로 '체크'만 하면 된다.

여성 승진할당제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는 성별 임금공시제 도입과 함께, "공공부문부터 여성 승진할당제를 논의"하고 "능력 있는 여성이 승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은 부당한 차별이므로 이를 부수는 조처는 물론 필요하다. 한국은 OECD 나라들 중에서 관리직과 고위직의 여성 비중이 유난히 낮다.

그러나 여성 관리자·임원이 크게 늘어난다고 해서 여성 노동자 임금이 저절로 오르는 않는다. 1980년대 이후 서구에서 고위직 여성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 노동자처럼) 정체되거나 심지어 삭감됐다. 지배계급이 노동계급의 일자리, 임금, 복지를 공격했을 때, 고위직 여성들도 그에 가세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의 초점은 심층 팔구 중간계급 여성들이 수혜자가 될 승진할당제가 아니라 노동계급 여성들의 조건을 크게 개선하는 데 맞춰야 한다. 다수가 저임금 직종·직급에 몰려 있는 여성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 또한 양육·부양·간병 등을 사회가 책임지고 일터의 노동시간도 대폭 단축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없애야 한다.

직무급제 도입이 성평등 촉진?

문재인 정부와 협력하는 '거버넌스'로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한다는 여성·노동 운동 대 개혁주의자들의 구상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계급의 단결된 투쟁이 필요하다 올해 3·8여성의 날 집회

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거나 심지어 정부의 이간질에 이용될 위험마저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직무급제 도입 계획을 밝히며 이를 비정규직·여성 등 차별받는 노동자를 위한 '공정임금'인 양 애기했다. 여성·노동운동의 상당수가 직무급제를 더 평등한 임금 체계로 여겨온 것을 겨냥한 것이다. 직무급제야말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이룰 수 있는 방식이라고들 한다.

출산과 양육 부담으로 인해 경력 단절이 심한 여성들에게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가 불리한 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직무급제가 자동으로 성평등을 촉진하는 것은 아니다. 직무급이 정착된 유럽과 미국을 보면, 성별 임금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공정한 직무 평가'가 자본주의에 구조화된 성별 직종 분리를 허물겠다는 증거는 없다. 서구에서도 여성은 여전히

히 저임금 직종이 다수인 산업에 몰려 있다. 여성은 계속해서 개별 가정에서 아동, 노인, 환자를 무보수로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는 건축 정책으로 공공서비스가 축소돼 노동계급 여성들의 부담이 증가해 왔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직무급제 도입 목적은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임금 상승 억제다. 대기업의 정규직과 근속 연수가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이 핵심 표적이다(관련 기사: 김하영,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임금'은 정말 공정한가?', 《노동자 연대》 228호).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올해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인상안과 미국을 보면, 성별 임금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노동계급의 단결된 투쟁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

한국의 여성 임금은 1980년 남성 임

금의 44퍼센트 정도에 불과했지만 계급투쟁 고양기에 여성 노동자들도 적극 투쟁해 남성의 63퍼센트 수준으로 격차를 좁혔다. 1987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여성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과 임금 인상 투쟁이 활발히 일어났는데, 동일임금 투쟁도 많이 일어났다.

그러나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기업주들과 국가가 노동계급의 일자리와 노동·생활조건을 전반적으로 공격하면서 2000년대 들어 임금격차 축소가 중단됐다. 2000년 이래 한국이 OECD 성별 임금격차에서 꼴꼴 1위를 지켜 온 데는 1998년 이후 10년을 걸친 민주당 정부도 특별한 기여였다.

유럽에서도 남녀 동일임금을 향해 일본 전진했을 때는 1968년부터 1970년대 초반 노동자 투쟁 상승기였다. 2012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지자체 고용 노동자(여성이 대다수)의 임금이 정부·보건 부문에서 같은 일

을 하는 노동자보다 상당히 적다는 게 성차별의 결과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승리는 5년간 노동자 수천 명이 참가한 운동 덕분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서비스노조(ASU)가 미조직 부문 조직화에 나서고 노동단체들이 시위를 벌였다.

여성 다수가 저임금 직종이나 하위 직급에 일하므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여성 노동자들의 동일임금 투쟁뿐 아니라 임금 인상 투쟁도 중요하다. 육아의 사회적 부담 확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도 필요하다. 그 비용은 기업들이 내야 한다. 여성 노동자들이 이런 요구를 내걸고 남성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성별 임금격차 해소법이다.

정의당 지도부의 낙태죄 폐지 추진은 옳다

최미진

보수 언론들이 이정미 정의당 대표(세례명 오티리아)와 심상정 의원(세례명 마리아)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두 의원이 가톨릭 신자인데도 낙태죄 폐지를 옹호한다고 매도하고 있다.

《월간 조선》은 "이들 의원이 소속된 본당 신부가 신자 재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일부 사제의 주장을 부각해 보도했다. 일부 가톨릭계 낙태반대론자들은 심지어 두 사람의 신자 자격 박탈을 주장하고 있다. 쉽지 않은 일인데도 이런 소리를 질러 대는 것은 마녀사냥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정미 대표는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 이후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를 약속했고, 심상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 허용을 공약

으로 제시한 바 있다.

태아가 인간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더 보호받아야 한다는 가톨릭계 낙태반대론자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모순일 뿐 아니라 여성차별적이다.(관련 기사: '월간 조선'은 "이들 의원이 소속된 본당 신부가 신자 재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일부 사제의 주장을 부각해 보도했다. 일부 가톨릭계 낙태반대론자들은 심지어 두 사람의 신자 자격 박탈을 주장하고 있다. 쉽지 않은 일인데도 이런 소리를 질러 대는 것은 마녀사냥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이는 가톨릭 신자 대부분의 실제 삶과 맞지 않다.

태아는 임신한 여성 신체의 일부뿐이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다. 무엇보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은 언제든 생겨날 수 있고, 그 경우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하는 데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결국 여성들의 삶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낙태금지론자들의 "생명 보호" 주장에 정작 여성의 생명과 삶과 건강은 빠져 있다. 이에 반대해 낙태죄 폐지에 나선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의원의 대의와 명분은 완전히 정당하다.

조승수 전 의원, 정의당 울산시장 후보로 선정

그보다는 더 좌파적인 후보가 나서면 좋겠다

김민식

정의당이 조승수 전 의원을 울산시장 전략 후보로 선정했다.

그는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기도 했지만, 1990년대 중엽 이래 개혁주의 정치인으로 변신해 울산북구청장(1998년 당선)과 두 차례 국회의원(각각 2004년과 2009년 당선)을 지낸 바 있다.

그의 선거구 기반은 현대자동차가 있는 울산 북구인데, 그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명백

히 선호한다. 노동운동의 상대적으로 온건한 부분을 대변해 온 정치인이다.

그는 연대임금제를 옹호해 왔다(사회연대전략의 일환이다). 연대임금제는 (사용자에 대한) 정규직 양보론으로 서, 정규직의 임금 인상분을 일부 모아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전체 노동자의 몫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윗돌 빼서 아랫돌 피기'에 지나지 않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만 부를 수 있는 해로운 노선이다.

무엇보다 그는 국가보안법 탄압에 매우 나쁜 태도를 취한 바 있다. 2007년

정의당 당원들이 행동해야 한다

낙태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정의당 내 토론이 시작했다. 12월 12일 열린 낙태죄 폐지 당원토론회에서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형법상 낙태죄 폐지와 낙태 허용 조건 완화를 골자로 한 안을 발제했다.(이 안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본지 232호 '낙태권 운동 —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다' 참고)

토론자로 나선 박인숙 여성위원장은 낙태 허용 조건을 정책위원회의 안보다 더 완화하자는 요지의 제안을 했다. 가령 사전 상담 과정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의무화하지 않되, 시술 전에 의사가 상담 절차를 안내하는 것만 의무화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성인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놓일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안도 검토하자는 제안이다.

김종명 정의당 건강정치위원장은 (25주 이후 태아의 경우 여성의 몸 밖으로 여성의 생명과 삶과 건강은 빠져 있다. 이에 반대해 낙태죄 폐지에 나선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의원의 대의와 명분은 완전히 정당하다.

한 "안전한 낙태를 위해 낙태의 허용 범위를 넓힐 뿐 아니라, 여성 건강을 위해 안전하고 저렴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수여야 하며,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낙태 허용 범위를 더 늘리자는 취지의 주장이 더 우세했고, 낙태 전면 금지 입장의 세력은 작았다.

물론 이 토론회가 끝은 아니다. 정의당은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일주일간 '전 당원 온라인 토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지도부의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에 대한 반발도 일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낙태권은 여성이 자신의 몸과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의 중요한 일부이므로, 여성 차별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면 낙태죄 폐지와 낙태 권리 보장을 지지해야 한다.

정의당 지도부의 낙태죄 폐지와 낙태 허용 법안 발의 추진이 굽힘 없이, 일관되게 이뤄지길 바란다. 또,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보장하는 방향에도 논의의 지평이 확대되길 바란다.

성소수자 자식을 둔 노동자 부모가 말한다

성소수자 운동 주류의 노동자연대 배제는 연대 정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관련한 성소수자 부모모임 회원, 화물연대 조합원, 개인 자격

저는 민주노동 화물연대 조합원이고 성소수자 부모모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연대 회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소수자 문제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11년 《참사기》에 참가해서였습니다. 당시 '동성애 혐오와 한국사회, 해방의 정치'라는 워크숍을 들으며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제 아들이 성소수자일 줄은 전혀 몰랐죠. 당시에는 단순히 제가 노동조합 간부로서, 이런 일이 조합원이나 친구들에게 다치면 어

떻게 말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제 아들이 양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했고, 저는 2014년 10월경부터 성소수자 부모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들과 함께 '국대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에도 참가했죠. 퀴어문화축제에도 갔습니다.

저를 부모모임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저를 포함해 4~5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여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실무진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부모모임이 지역과 대학들을 돌았습니다. 여러 상이 조합원이나 친구들에게 다치면 어

데, 이것이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여기에는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부모에게 커밍아웃을 못 했던 자식들이 와서 상담하기도 했고, 부모들이 성소수자 자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기도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배우는 시간들이 됐죠.

‘오판’ 현상

또, 부모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이 겪은 경험들을 글로 쓰고 책으로 만들어 나눠 주기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시야가 넓어졌고, 우리 자식들을 혐오하는 세력들에 함께 맞서 우리가 방패가 돼

주자고 했죠. 그래서 이런저런 행사에도 참가하고, 현수막도 펼치고 부모모임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울산 퀴어라이브에서도 노동자연대에 대한 '제명' 시도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당시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제가 야간 택배 일을 하고 있고, 최근 개인사가 많아서 활동을 긴밀하게 못 하고 있었거든요.

울산 퀴어라이브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아 보니, 그 과정과 결과가 전혀 정당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노동자연대 회원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노동자연대의 말만 듣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저래 알아 보니, [최후축]이 먼저 노동자연대를 초대해 놓고는 나중에 제명을 시도했고, 그 이유도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명과 같은 특별한 결의를 하려면 적어도 사실 관계에 기초해 정확히 한 진상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당사자 의견도 충분히 듣고요. 게다가 소수 단체들이 제명한다는 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진보운동에서 들도 보도 못한 초등학교 '오판' 현상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소수가 다시 소수를 배척시키는 사실상의 폭력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다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연대 정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연대한 여러 의견과 다양성을 모아 내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는 서로 이해하고 극복하면서 큰 틀에서 동의할 수 있는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화물연대 조합원입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화물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여서 화물운송 특수 고용노동자연대'를 만든 거죠. 그리고 화물연대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철도·버스·택시·공항·항만 등의 노동자들이 뭉쳐 전국운수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든 더 큰 힘을 만들어 내고자 발전·전기·가스 등의 노동자들과 함께 전

국공공운수노조로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성소수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는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합니다. 학교, 군대, 직장 등 모든 곳에서요, 특히 직장에서 성소수자라는 게 알려지면 심지어 해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 자식들의 문제이고, 인권 문제이고, 우리의 미래 사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죠.

공통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만약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치열한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연대가 성소수자 쟁점 활동을 열심히 해 온 것을 전·전기·가스 등의 노동자들과 함께 전

에서 노동자연대를 배제해야 한다는 제기가 계속 있다면 양측이 모두 모여 공개 토론회를 해야 합니다. 다같이 모여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솔직하게 얘기하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평가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정확히 파악되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 사태가 심각하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사관과 구글의 후원

한편 성소수자 부모모임이 미국 대사관과 구글의 후원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바다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들이 이 모임을 하는 이유는 아주 소박하

다. 내 자식이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이 사회에서 폄박받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선 것입니다. 또, 사회의 집단적 혐오에 대항하는 것을 넘어 평등 세상이 오는 것을 앞당기기 위해 나선 것이죠. 아마도 [부모모임 내에서는] 미국 대부분이 정확히 파악되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 사태가 심각하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자본과 미국의 후원은 환영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적응돼선 더욱 안 되고요, 자본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자본은 야누스적입니다. 그들이 돈을 후원해 주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서구에서는 자본에 반대하는 성소수자 운동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구 운동은 어떻게 분화했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자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한국 성소수자 운동에서 일부가 경제적, 사회·정치적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혀 불필요한 타협의 길을 가려고 한다 해도, 좌파가 바르게 가는 길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소수자 운동이 전진하는 길일 것입니다.

박유하의 언론 자유? 좌파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

차승일

12월 7일 박유하 세종대 교수(이하 존칭 생략)를 지지하는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 모임이 결성됐다.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은 세계적 지식인들이 이름을 올렸다고 대서특필했다.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형사재판 판결(서울고등법원 2심)이 10월 27일에 나온 것에 대한 대응이다.

박유하 지지 선언은 2015년 말에도 있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오에 겐자부로도 이미 그때부터 참가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엄 촘스키, 브루스 커밍스, 와다 하루키 등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국내 지식인 명단은 2015년에 견줘 대폭 바뀌었다. 우선 2015년 선언에는 194명이 참가했는데, 이번에는 49명으로 대폭 줄었다. 2015년에 동참한 김규항, 유시민, 장정일, 홍세화 등이 이번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그 뒤로 국내의 논자들이 박유하 주장의 본질을 세밀하게 비판한 덕분인 듯하다. 특히, 정영환 교수의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푸른역사)는 박유하 주장의 모순과 맹점을 낱알이 파헤치며 반박했다. 본지도 반박 기사를 내보냈다.(김영익, ‘제국의 위안부’ 옹호자를 비판한다: 박유하는 잘못된 사실을 확산하는 제국 옹호자, 〈노동자 연대〉 192호)



천대받는 이들을 모욕하는 게 '학문의 영역'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뉴라이트가 가세하다

이번 선언의 또 다른 특징은 안병직, 이영훈, 이대근 등 뉴라이트의 '낙성대파'가 가세했다는 점이다. 역사문제연구소의 후지이 다케시 연구원은 〈한겨레〉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썼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노무현 정부 때 우파들이 '표현의 자유'를 코드명 삼아 투쟁을 벌인 것이 떠올랐을 게다. 2005년 10월 우파들이 대거 참가한 시국선언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정체 불명의 배후 세력 등 친북·좌경·반미” 인맥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과 KBS·MBC·SBS 등 공중파 TV를 장악하고 … 대한민국의 ‘좌향좌’를 선도하고 있다.” 아, 이 시기감!

지금도 우파들은 언론 통제 운운하므로 '표현의 자유' 문제는 앞으로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전선이 될 것이다.

올해 10월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박유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유하 지지 모임은 이렇게 주장했다. “군사 독재 정권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사상적 통제가 다시금 부활하는 듯한 느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이 또다시 강제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영훈이 “사상적 통제” 운운하니 역겹다. 그는 앞서 말한 2005년 우파선언에 이름을 올린 인물인데, 그 선언은 좌파 역사학자 강정구 교수에 대한 마녀사냥도 촉구했다. “망언을 한 친북·좌익” 교수에 … 대해 좌파 정권

의 법무부 장관이 …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불구속 수사’를 지지하는 국기(國基)를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강정구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니 우파가 벌금 1000만 원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것도 우습다.

박유하 지지에 앞장서고 있는 김철인하대 명예교수는 이영훈과 함께 뉴라이트의 주장이 잔뜩 담긴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책세상)을 편집했다.

일본의 자유주의 지식인 와다 하루키가 박유하 지지에 참가한 것은 하루키가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국가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현실론자’라는 점과 관계있다.

1990년대 무라야마 정부가 ‘도덕적 책임’만 인정한 채 ‘아시아여성기금’을 해결책이라고 내놓았고, 한국 ‘위안부’ 피해자의 3분의 2 이상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는데, 하루키는 이 기금의 이사로 참여했다.

2015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는 점증하는 동아시아 긴장 속에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한겨레 21》 김윤형 편집장은 “일본 리버럴”이 이런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루키의 박유하 지지 참가는 이 한계의 논리적 귀결이다.

박유하의 엉터리 주장과 피해자 모욕

박유하는 오랫동안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주장해 왔다. 두 국가의 화해의 출발은 일본 국가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일 텐데, 박유하는 오히려 ‘위안부’ 피해자들이 먼저 용서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식민 지배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의] … 혐한은 1990년대 초 이후의 역사 문제 갈등에서 한국인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언제까지고 비난만 한다는 생각에서 오는 부분이 크다.”(《제국의 위안부》 7쪽, 이하 쪽수만 표기) 피해자의 사죄 요구가 문제라는 식이다.

박유하의 주요 전술은 비판 차단용 전술을 군데군데 끼워넣어 자기 주장의 본질을 은폐하는 것이다. 그래 놓고는 비판이 일자 ‘내 책을 읽어 봐라’는 식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 2장 1절에서 박유하는 위안소 포주의 말을 빌려 ‘위안부’들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을 때에도 그 일을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진술, 일본인 남성의 소설을 토대로 “위안부”들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동할 수도 있었다”는 진술, 일본군 장교를 인

용해 “군인들이 ‘관리’는 했지만 직접 모집하거나 영업은 하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을 거의 30쪽에 걸쳐 서술한다. 그 래 놓고 “물론 이들 ‘열 명’이 ‘1000명’을 상대해야 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들의 ‘위안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하는 말을 쓱 집어넣는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제의 기획자이며 군위안소 설치 운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군위안소를 감독 통제하는 주체였다”는 … 것은 문헌과 정황 속에서 확인”되므로, 박유하의 일부 서술은 사실도 아니다.(강정숙, ‘일본군 성노예(위안부)제 문제의 쟁점과 과제’, 《젠더리뷰》 2012년 가을호)

책략이거나 혼동

바로 이 때문에 박유하가 ‘위안부’를 모집한 업자들이 진정한 문제라고 강조하는 것도 책략이거나 혼동이다. ‘위안부’ 모집 업자들은 종범으로서 죄가 분명하지만, 이렇게 종범만을 강조하는 것은 주범(일본 국가)의 죄를 가리는 효과를 낸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은 박유하가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인 듯 묘사하고 일본군과 ‘위안부’의 관계가 “동지적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박유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하지만, 돈을 벌러 외국 위안소로 자발적으로 간 일본 성매매 여성인 “가라유키상의 후에, ‘위안부’의 본질은 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했다(32쪽). “조선인 위안부는 … 일본군과 함께 전쟁에 이기고자 그들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한 이들이기도 했다”고도 했다(205쪽).

이로부터 박유하가 끌어내는 결론은 이렇다. “법적 책임을 일본 국가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 일본 국가가 … 위안부들의 불행을 만든 구조적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있다. … 그것이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이 90년대의 일본의 사죄와 보상이었다.”(191쪽)

바로 여기서 박유하의 입장은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만난다. 이는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데로 나아간다.

표현의 자유로 옹호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법적 규제

중요하다.

박유하처럼 억압받기는커녕 완전히 자유롭게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제국주의자들의 편에 서서 수십 년간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천대받아 온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에 “표현의 자유니까”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성지향 차별처럼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는 주장을 할 자유까지 표현의 자유라며 옹호할 수는 없다.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운동의 정당성을 폄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동 안에서는 이런 주장을 규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

물론 좌파가 그런 차별과 억압의 핵심 기구인 자본주의 국가더러 법률적 제재를 가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국가

의 사상 통제는 오히려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경우가 훨씬 흔하기 때문이다.

박유하가 관련된 이 사건에서는 특별하게 유념할 것이 있다. 자신들의 존엄을 무시하는 주장을 지속하는 박유하에게 ‘위안부’ 피해자들이 법에 기대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었으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안부’ 피해자 vs. 박유하라는 양자택일의 선택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일 가치로 말하는 것은 박유하를 편드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는 진보의 대의에 역행하는 일이다. 일부 진보 지식인들의 박유하 지지 선언 동참이 유감인 까닭이다.

※ 본지 웹사이트에 박유하의 방법론, 민족주의 비판, 페미니즘 담론 이용을 다른 글이 있으니, 함께 읽으십시오.



비트코인 열풍

투기에 그칠 것인가, 자본주의의 구원투수인가

김종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라고도 잘못 알려짐)에 대한 투기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비트코인 시세는 지난 수개월 동안 급등락을 반복하면서도 대폭 치솟았는데, 12월 13일 오전 12시 기준 국내 시세가 1912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비슷한 원리의 암호화폐들로도 번져, 몇 달 전까지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더리움’의 시세도 급등해서 67만 원을 넘었다.

한국의 비트코인 투기열풍은 국제적으로도 유명하다. 예컨대, 〈뉴욕 타임스〉는 한국이 투자 열기가 가장 뜨거운 시장이라고 보도했다.

“학생들은 수업 사이의 쉬는 시간마다 시세를 살펴보고 있고, 노동자들은 커피를 마시러 줄을 서는 동안에 비트코인 거래를 하고 있다.” 전 세계 거래량의 20퍼센트가량이 한국 계좌라고 하니 가공할 만한 수준이다.

최근 들어서는 여러 시중은행들도 위기감을 느꼈는지 비트코인 가상계좌 관련 거래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비트코인 규제에 별 관심이 없던 한국 정부도 뒤늦게 태도를 바꾸고 있다. 금융위원장 최중구는 비트코인 전면 거래 금지를 포함한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뒤늦은 규제에 적잖은 노동자·청년들이 큰 손실을 볼 위험에 빠졌다. 비트코인 시세 하락으로 이런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는 것에 대비해, 정부가 앞장서서 이들의 손해를 규제해 주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바른정당 대표 유승민은 얼마 전 미국 선물시장에 비트코인이 등록된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비트코인 규제 시도를 비방했다. 비트코인이 금융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시장 활성화에 눈이 멀어 비트코인 버블을 방치했다 터지면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 피해를 입을 것이다. 투기 자본들의 먹잇감이 된 비트코인을 가만히 놔두자는 주장이야말로 설득력이 없다.

‘탈집중화된 화폐 경제’?

그럼 대체 비트코인이 무엇이기에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일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주된 특징은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은 이른바 ‘채굴’을 통해 발행되는데, 누구나 공식사이트에 접속해서 매우 복잡한 수학 문제를 컴퓨터 연산을 통해 해결하면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

발행 시점에 암호화돼 저장되며, 거래할 때도 거래 기록이 거래자들 외에 다른 비트코인 사용자들에게도 공유되기 때문에 거래 기록 또한 기본적으로 조작하기가 쉽지 않다(다만 비트코인을 저장하는 가상의 ‘지갑’ 자체를 훔치는 것은 가능하다). 별도의 암호화체계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송금을 할 때도 기존 은행들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을 띠게 된다.(그래서 법망을 피하려는 은밀한 온라인 직거래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요컨대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통제 없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의해서 발행되고, 기존 은행들과 관계없이 송금하는 등 관리될 수 있는 화폐인 것이다.

이처럼 누구나 채굴(발행)할 수 있고, 암호화된 직거래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속성 때문에, 오스트리아 학파 등 자유지상주의 경제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으로 ‘탈집중화된’ 화폐경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상에 빠지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전도사 클라우드 슈밥은 “어떤 중앙은행에 의해서도 규제되지 않고 감독받지 않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이 감소”하고, “투명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물론 ‘탈집중화된 화폐 경제’라는 생각이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2009년에 터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관련 있을 것이다. 2009년 금융위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싼 이자로 화폐를 대거 공급해서 만든 부동산 버블 때문에 촉발됐다. 위기를 진정시킬 때도 ‘양적완화’ 정책 등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는데, 여기서 득을 본 것도 투기에 앞장서 막대한 이익을 취해 온 거대 은행과 부자들이었다.

이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화폐 체제에 대한 불신과 함께 미국 달러화가 앞으로 세계 본위화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커지면서 최근까지도 온갖 다양한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부는 자체적으로 가치를 갖고 있는(그래서 중앙은행들이 맘대로 조절할 수 없는) 금을 본위화폐로 하는 금본위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아이디어는 처음에 ‘온라인화한 금’으로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듯하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대중적인 투기 대상이 된 것은 바로 국가의 ‘보증’ 덕분이다. 유럽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생기자 비트코인 투자 붐은 커지기 시작했고, 반대로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대대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자 2014년 초에 한차례 대폭락하며 잠잠해진 바가 있다.(때마침 해킹으로 인한 비트코인 분실 사태가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그런데 올해 4월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키자, 비트코인 수요가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기 시작한다. 국가의 관리 방향에 따라 시세가 이토록 빠르게 급락하는 것을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는 완전히 투기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상황이다.

자본주의의 구원투수인가

이처럼 비트코인이 투기에 민감하다는 점을 보더라도 ‘암호화폐’는 안정적인 화폐로 기능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마르크스의 말을 빌리면, 자본주의는 ‘일반화된 상품 생산 체제’이고, 화

폐는 본질적으로 ‘일반적 등가물’이다. 겉보기에 매우 이질적인 상품들이 교환된다는 것은 상품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며, 또한 상품들이 서로 비교된다는 것은 상품들 안에 공통의 가치가 있다는 점(익히 알려졌듯이 마르크스는 이를 사회적 필요 노동량이라고 봤다)을 전제한다. 즉, “동질성이 없는 교환은 있을 수 없으며, 동질성 또한 양적인 비교가능성 없이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상품의 가치는 분명 객관적 실체이기는 하지만, 그 가치에는 자연적 요소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따라서 상품 생산의 확대·발전은 ‘일반화된 등가물’인 화폐의 등장을 필요로 하며, 반대로 화폐의 등장은 상품 생산의 확대·발전(일반화된 상품 생산 체제)을 가속화한다.

그런데 상품 교환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려면 화폐가 안정적으로 가치척도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비트코인처럼 급등락하는 투기 대상은 결코 제대로 된 가치척도 기능을 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암호화폐는 비밀 거래나 소량의 온라인 거래를 위한 상품권처럼 쓰일 수는 있을지언정, ‘일반적 등가물’이라는 화폐의 본질적 속성을 지니기 곤란할 것이다.

물론 비트코인에 사용된 암호 기법(블록체인)은 기존 은행들이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국가 기구가 직접 비트코인을 관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신기술이 ‘중앙집권적 화폐 체제’에 흡수되는 것뿐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의 지적처럼 “자본주의는 블록체

인 기술을 무시하고 있지 않다. 사실은 다른 혁신들처럼, 이를 통제하에 두고 싶어 한다.” “비트코인이 정부에 세금을 지불하는 통화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기존의 불환화폐와 [고정적인] 가격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정부는 [화폐경제의 영역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주체로서] 존재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화폐라는 특수한 상품은 단지 시장을 통해서 관리될 수 없고, 반드시 자본주의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가치의 생산과 유통, 더 나아가 자본의 축적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화폐의 생산과 유통 역시 끊임없이 원활히 진행돼야 한다. 일반적 등가물이 있어야 일반화된 상품 유통이 가능하므로, 자본주의 하에서 모든 경제 활동은 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상품을 순전히 시장에 맡겼다가는 오히려 화폐 유통에 차질이 생겨 자본주의 경제 전반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 기구는 반드시 화폐 관리를 위한 정책을 펴며 ‘탈집중화’되게 놔두지 않는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 등가물’로서 금이 부상하고 금본위제가 확립되는 데에 자본주의 국가가 큰 구실을 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금본위제에서도 화폐 가치는 시장에 내맡겨진 게 아니었다. 중앙은행들은 통화량을 조절하며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했다.(베리 아이켄그린의 《글로벌라이징 캐피탈》을 참고하시오.)

따라서 비트코인 같은 신기술로 화폐 제도를 개혁하면, 자본주의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몽상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논쟁: 서재정 vs. 이승한
한반도 긴장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 특집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 중동에 불어 오는 폭풍우

● 수천 년 된 갈등인가?
유대인 로비 때문인가?

● 팔레스타인 탄압과 저항의 역사

★ 의사협회 ‘문재인 케어’ 반대 명분없다
정부가 책임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라

★ 12·28 ‘위안부’ 합의 2년 연재 ①
제국주의가 저지르고 은폐한 문제

★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들의 현실

★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사면은 당연하다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주민 차별 현실은 여전하다

임준형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이다. 1990년 UN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해 2010년 제정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유입국(소위 선진국들)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 협약이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가족 결합 권리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촛불 운동 덕분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도 이 협약의 비준은 약속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재인이 공약한 이주민 처우 개선 약속이 후퇴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주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랐다. 지난 8월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 이동 금지 때문에 네팔 이주노동자 두 명이 연이어 자살했다. 5월에는 경북 군위의 돼지농장에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안전 장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정화조를 청소하다가 질식사하기도 했다.

사업장 변경 금지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에 종속시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이런 비극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야만적인 단속·추방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속돼 단속 과정에서 부상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속출했다. 지난 6월 수원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단속 도중 이주노동자를 집단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얼마 전에는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가 살해당했는데, 가해자는 미등록 체류자였던 피해자를 단속이 있다는 거짓말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올해 10월 미등록체류자는 24만 4000명에 이르러 2006년 이래 가장 많았다.(그동안 전체 이주민 숫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미등록 체류율은 낮아졌다.) 이는 단속·추방 정책으로 미등록 체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에게는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 준다.

또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이주노동자의 임금에서 숙식비를 사실상 강제로 공제할 수 있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했지만, 이주노동자가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가 숙박 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68퍼센트였다.

이 지침 시행으로 통상임금의 20퍼센트까지 공제할 수 있게 돼 이주노동

자들의 임금 손실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알량한 임금조차 대폭 삭감하는 숙박비 공제 지침을 폐지하라는 지속적인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이주민 외면한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11월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초안(이하 기본계획안)에서 올해 이주노동자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내몬 정책들을 폐지하거나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문재인이 비준하겠다고 공약했던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과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 등에 따르면,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고용허가제는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제도다. 그러나 기본계획안에는 사업장 이동 금지 폐지 등의 내용이 전혀 없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할 때 영장을 발급받도록 하는 것과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아동을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하지 못하게 하겠다고던 공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신속출동팀' 운영, 권역별 광역단속팀 확대 등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문재인은 '결혼이주민자 정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확립'과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내실화'도 공약했다. 그러나 기본계획안은 '자립과 참여' 능력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결혼이주민 등 정주 이민자에 대한 복지 지원은 늘리지 않는다. 결혼 이민자 가정의 월평균 가구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2.6퍼센트나 돼(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복지 확대가 꼭 필요한데도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체류 자격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미등록 체류자였던 태국 이주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에서 보듯, 안정적인 체류 자격 보장은 이주 여성의 정착과 인권 보호, 폭력 피해 방지도 필수적이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배우자의 신원 보증이 있어 야만 체류 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 귀화하기 위해서도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정 폭력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고통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난민에도 우호적이지 않다. 10월까지 올 한 해 동안 심사 결정자 수 대비 난민 인정자는 1.9퍼센트에 불과했다. 이는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1.5퍼센트)보다 조금 높을 뿐



이주민은 우리의 이웃이자 동료이다

이다. 2011년부터 난민 인정률 지표들은 계속 떨어져 왔고,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 올해 5월과 6월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난민 신청자 4명이 강제 송환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본계획안에 난민 인정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은 없다.

인종차별 반대

이주노동자 100만 명을 포함해 이주민이 200만 명인 상황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서 인색하기 짝이 없다.

올해 미등록 체류자 단속 "실적"을 홍보하며 내년에 "특히 서민 일자리 잡식이 심한 건설업종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국민의 일자리 보호·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면,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업과 복지 부족의 책임을 이주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이주민의 대다수는 한국에 부족한 노동력을 제공해 경제에 기여했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경제 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제국주의 긴장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이주민 차별에 반대하며 단결을 강화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인종차별은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은 가리고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므로 노동계급 전체에게 해악적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권리와 복지가 축소되는 것은 다른 취약

한 사람들의 권리와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인종차별 반대는 노동운동의 중요한 요구가 돼야 한다.

최근 이주노조는 전국 곳곳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규약을 개정해 조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주노동자들이 기존 노조에 가입하는 데 여전히 문턱이 높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노조로 조직하기 위한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화 노력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은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인 이주노동자와 연대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함께 참가합시다!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대회'

수도권 대회

일시: 12월 17일(일) 오후 2시
장소: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
주최: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동위,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권 대회

일시: 12월 17일(일) 오후 3시
장소: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2층 강당
주최: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대책위

대구경북권 대회

일시: 12월 17일(일) 오후 3시
장소: 대구 2·28 기념공원
주최: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